

지역지부 임원후보 등록 1차 마감, 충남지부 경선

1일 충남, 경남, 경주, 대전충북, 전북지부 등록 완료·광주전남, 울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포항, 구미, 부산양산지부 등록 연장

9월 1일 17시 금속노조 14개 지역 지부에서 지부 임원선거 1차 후보등록을 완료했다. 등록 마감 결과 충남지부는 두 개 후보조가 경선을 벌이고 경남, 경주, 대전충북, 전북지부는 단독 후보다.

충남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후보조는 기호 1번 정원영(개별)-정용재(현대제철지회)-이상호(동희지회)와 기호 2번 김선엽(현대제철지회)-홍종인(유성기업지회)-김정희(개별) 등이다. 세 명을 선출하는 부지부장 후보에 기호 1번 유영주(대한칼소너지회), 기호 2번 김대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기호 3번 박혜영(경남제약지회), 김학성 기호 4번(다스아산지회) 후보 등이 등록해 경선을 치른다.

경남, 경주, 대전충북, 전북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단독 후보에 찬반투표를 벌인다.

전북지부 임원 후보는 차덕현(타타대우상용차지회)-전충배(일성테크지회)-황의택(익산지회금속지회) 등이다.

대전충북지부에서 김정태(한운시스템대전지회)-변승규(대한이연지회)-성세경(개별)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두 지부 모두 부지부장 입후보자는 없었다.

경남지부 임원 후보에 홍지욱(개별)-이선임(한국산연지회)-김정철(개별)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네 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지부장에 기호1번 정문진(티케이벨브지회) 후보와 기호2번 진창근(세신버팔로지회) 후보가 출마했다. 여성할당 부지부장에 이은선(마창지역금속지회) 후보가 등록했고 비정규직할당 부지

부장에 입후보자가 없어 보충선거에서 선출한다.

경주지부에서 박장근(에코플라스틱)-이중희(다스)-최익선(개별)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했다. 부지부장 후보로 기호 1번 김태하(에코플라스틱), 기호 2번 김용희(다스지회), 기호 3번 임도형(다스지회) 후보가 등록했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포항, 구미, 부산양산지부 등은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후보 등록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6일 13시로 연장공고를 냈다.

광주전남지부와 울산지부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지회 임금·단체교섭 일정을 고려해 등록마감 일시를 각각 4일과 7일로 늦추되 투표는 노조 1차 투표 일정에 맞출 계획이다.

“현대제철 신임금체계, 현장 찢는 시도”

30일,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파업 출정식... “신임 노동자 차별 이중임금체계 도입 중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김태년, 아래 지회)가 현대제철의 신임금체계 도입 시도에 맞서 파업에 나선다.

지회는 8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무관리 적폐 청산, 임금 개악 분쇄, 2017 임투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총력투쟁 8.30 출정

식’ 을 열고 쟁의대책위원 파업을 전개했다.

현대제철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신임금체계 도입 후 임금총액이 2백만원가량 떨어진다. 현대제철은 8월 11일 ‘임금체계 개선 방안’ 문건에서 ‘현재 재직자의 임금총액 저하분은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보전방안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 결정한다’ 고 밝혔다.

지회는 신임금체계 도입이 신임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려 재직자와 신임 노동자 사이 이중임금체계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회는 교섭 상황에 맞춰 파업 등 투쟁 전술을 결정한다.

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논란에 썩기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 선고... “신의칙 불인정. 기아차, 4,223억 원 지급”

법원이 재벌과 경영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위해 호소와 협박을 일삼으며 매달린 완성차 통상임금 논란에 썩기를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조합원 2만7천



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며,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못 박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청구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지급 임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조926억 원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원금 3천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사실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에 기아차가 매년 1조 원에서 16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

제야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통렬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 5천4백여 개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 피고가 해외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며 “가정으로 결과물 미리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사드 보복과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실이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번 통상임금 소송분은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

이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 라며 “체불한 노동의 대가를 당장 지급하라” 라고 현대기아차그룹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위기를 들먹이는 교섭 회피와 파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노조가 제안한 현대기아차그룹과 사회적 교섭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밝히며 현행법 준수와 판결 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기아차지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은 통상임금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불법과권 비정규직, 일감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거래, 하청업체 노사관계 지배개입 등 문제를 해결하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 노사관계와 산업 평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아차지부 정책실장은 “다음 주 2017년 교섭을 재개해 판결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할 것” 이라며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포함해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